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4-5호

발행일: 2024. 3. 18. (월)

제413회 국회(임시회, 2024. 2. 19. ~ 2024. 2. 29.)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가. 정책금융 지원 확대

나. 시장기능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1. 개관

제413회 국회(임시회)는 2024년 2월 19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11일간 진행되었으며, 지난 2월 29일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 모두 57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13회 국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1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한편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 의무 개시 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3)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에서 25조 원으로 늘려 산·원전 등 국내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4)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상정되었으나 모두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제413회 국회의 2024년 2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57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정무위원회(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	기획재정위원회(1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의원 등 12인
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의원 등 10인
1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김영선 의원 등 10인
11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의원 등 10인
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4	행정안전위원회(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7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의원 등 15인
1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 등 12인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등 11인
2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의원 등 12인
2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의원 등 11인
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의원 등 15인
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등 10인
26	보건복지위원회(4)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 의원 등 11인
2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의원 등 10인
2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30	환경노동위원회(6)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31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3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3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34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3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의원 등 10인
36	국토교통위원회(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3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3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3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4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4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의원 등 10인
4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의원 등 11인
4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의원 등 11인
4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등 13인
4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의원 등 10인
47	여성가족위원회(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4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49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5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5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52		만 나이의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 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유상범 의원 등 11인
53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 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조은희 의원 등 10인
5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5인
55	정치개혁 특별위원회(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정책금융 지원 확대, 시장기능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정책금융 지원 확대

개요

정책금융은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경제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의 금융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수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산업이나 기업에는 자금을 지원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책금융은 정부가 보증을 서거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이러한 산업이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디지털 전환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민간의 역동적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시장보완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기조입니다. 민간금융 영역 정책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책금융 성과를 평가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편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국회는 방산·원전 등 산업에서의 늘어나는 해외 수주와 반도체·배터리·바이오와 같은 국가 전략·신성장 산업에서 핵심기술 개발, 인수합병 등을 위한 자금 수요를 반영한 입법안을 통과시켜 이목을 끄니다.

2024년 2월 29일 본회의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상향하여 대외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해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기획재정위원회	<p>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촉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증대,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현행법상 법정 자본금은 15조 원이며, 2024년 2월 현재 납입자본금 잔액은 14.8조 원으로 법정자본금 15조 원에 근접(소진율 98.5%)한 상태임.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2009년 4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14년 8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된 이후 최근 10년간 법정자본금 수준에 변동이 없었음. 그런데 최근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여 민간 금융기관 참여가 어려운 방산·원전과 같은 산업에서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반도체·배터리·바이오와 같은 국가 전략·신성장 산업에서도 핵심기술 개발 및 M&A 등을 위한 자금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사우디 아라비아 네옴시티 건설사업, 중동 에너지 개발사업 등 해외 각지의 대형 인프라 사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적기에 충분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더구나 법정자본금 소진율이 100%에 육박한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시 외화 여신 비중이 큰 한국수출입은행의 BIS 비율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5조원으로 증액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대외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p>	2024-02-29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재부·금융위)

과제목표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정책금융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시장보완 분야 집중 지원

주요 내용

(투자·고용·리쇼어링 활성화)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 국제적 조세경쟁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 등 세제지원 강화
-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해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리쇼어링 지원 강화
- 정책효과는 낮으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 세대 간 기술·노하우·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기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 등 합리화 등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금융 중복 최소화 및 시장보완 분야(미래투자 등) 집중 지원

- 정책금융 공급은 미래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위험분야에 중점
-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책금융 성과 평가 및 정책금융의 발전적 재편 추진

(ESG 금융기반 마련) 금융권의 ESG 분야 자금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강화 추진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2022. 6. 16.)

- (유망 신산업 육성)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 등 지원
 - 차세대 AI, 데이터로 이어지는 디지털 초일류 기반 조성
 - * (AI) 초거대 AI 모델 활용 지원(22.6월~), 재난안전·환경분야 AI 선도과제 추진(22.5월) (AI 반도체)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NPU Farm) 구축 및 실증(25년) (데이터) 범정부 데이터산업 진흥 제1차 기본계획 수립(~22.12월)
 - 바이오, 자율차, 스마트물류 등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 (지능형바이오) 빅데이터·AI 기반의 바이오 제조공정 혁신센터 구축(~25년) (자율차) 핵심 첨단인프라(C-ITS,정밀도로지도)를 전국 주요 도로에 구축(~27년) (물류)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22.10월),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구축(~26년)
 - 우주, 로봇, 나노 등 미래유망 산업 육성 기본계획 마련(22년말~23년)
 - 정책금융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K-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
 - * (정책금융)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대상 정책금융 투자 (해외진출)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해외진출 활성화 등
 - 데이터 활용, 자동화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농업 확산·고도화
 - *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2下),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가동 등

출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 6.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 7. 4.)

- **(시스템 보강)** 대형 해외수주 등이 실제 수출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세제 등 수주지원 시스템 보완
 - 저신용국 리스크 분담 및 대규모 지원 필요성에 대비하여 수은의 특별계정 출자*를 지원하고, 법정자본금 한도(現 15조원) 상향 추진
 - * 저신용국(국가신용도 B+ 이하) 인프라사업 수주시 정책금융 공급(現 1.1조원)
 - 정책 금융기관(산은·수은 등)이 대표 금융추천자로 취득한 대출채권을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
 - * 공개경쟁입찰 등을 원칙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적용사항이 아님을 명확화하여 일반 금융기관처럼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
 - 국내 건설사 해외자회사 대여급에 대한 세계 혜택 확대* 추진
 - * 해외건설수주에 따른 대손 위험 완화를 위해 국내건설기업이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대여급에 대해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급에 대손충당금 설정 허용

출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 7.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금융위원회, 2022. 8. 8.)

[세부과제4] 민간 혁신성장 금융지원 강화

□ 기본방향

- 민간 분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모험자본 활성화

□ 추진과제

- ① 정책금융은 민간금융과 중복 최소화하고 시장보완분야(미래투자 등) 집중
 - 정책금융 공급시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미래핵심분야에 집중
 - 벤처·스타트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펀드 신규 조성 추진
- ② 민간 모험투자시장 성장을 위해 새로운 투자수단 도입 및 제도개선
 - 유망 비상장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상장을 통해 환금성도 높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 일반투자자의 유망 비상장기업 투자기회 확대
 - *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현재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22.5월)
 - 혁신·벤처기업이 규제부담 없이 보다 적시에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 규제 합리화 등

◆ 고금리 전환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혁신·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우려
⇒ 정책금융 역할 강화 + 모험 자본육성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3 정부 업무보고(금융위원회, 2023. 1. 30.)

- **신성장 4.0, 수출 5대강국 도약 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강화**
 - ① 정책자금공급액을 205조원으로 큰 폭 확대(전년비 +11조원)하고, 신성장4.0 전략 등을 반영한 5대 중점전략 사업*에 81조원 집중공급
 - * ①글로벌초격차 산업 지원 ②미래유망산업 육성 ③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④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⑤3高 현상 등에 따른 기업경영여로 해소
 - ② 정책금융(기은)-무역협회 협업으로 수출기업 低利대출상품* 출시 등 총 16조원의 수출금융 전용상품 공급
 - * (대상) 수출 중소기업(수출 1천만불 이하) / (지원조건) 대출금리 최대 Δ 2.7%p 인하
 - ③ 글로벌 공급망재편에 대응하여 '공급망 대응펀드' 조성(23년중 1조원)
 - * (지원분야 예시) ①대기업-협력업체의 해외현지 동반진출 지원 ②소부장 경쟁력 강화
 - ④ 혁신성장펀드 조성(5년간 15조원)을 통해 신산업·전략산업 육성
 - 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기한 연장 및 필요시 지원업종 확대 추진
 - ⑥ 산은 부산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특화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안: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증액 2020. 11.

윤영석 의원안 등: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증액 2023. 11.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혁신성장 정책금융 성과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용역보고서 2022. 11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과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2021. 12. 24.

본 보고서에서는 녹색금융 활성화 및 정책금융 지원 필요성을 살펴보고, 녹색금융 추진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요국의 녹색금융기관 설립 현황과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입법과제를 검토한다.

정책금융의 선제적 산업재편 기능 강화 필요성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포커스」 2023. 9. 9.

그간 우리나라 정책금융은 중소기업 자금지원 중심으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최근 우리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정착되는 가운데 산업별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정책금융은 신성장 동력 육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별 경쟁력에 따라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미래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의 선제적 산업재편 기능을 법정부적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시장기능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개요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을 도모해 왔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개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관련 제도 조정 등을 위해 다양한 법령을 개정하고,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에 대해 부과하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어 이목이 쏠립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왔습니다. 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이전 정부(2021년)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정부는 2023년 1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야 의견 대립으로 법률안이 1년 넘게 계류하다가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타협점으로 하여 막바지에 통과되었습니다([입법정책브리핑 제2023-12호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 제2021-5호 주택 정책](#) 이슈 등 참조).

2024년 2월 29일 본회의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 의무 개시 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에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국토교통위원회	<p>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현행법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비율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 동안 계속 거주하게 하는 거주 의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 의무 규정에 따라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 의무 기간 동안 자신의 여건에 맞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입주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만 거주 의무를 개시하면 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수분양자의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 방법을 명확히 하고,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p>	2024-02-29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국토부)

과제목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추진
정비사업 규제 개선,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기능 정상화, 공시가격 등 각종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보완

주요 내용

(로드맵 수립)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 및 추진

※ 층간소음 기준 및 인센티브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 고품질 주택 공급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공급 촉진

-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

-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 임대주택 확충

- 임대차 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 및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및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추진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기획조사 등 실시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 12. 21.)

②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추진

-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
-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23.初 별도발표, 국토부)
-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 적용
*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限 3개월) 폐지, 9억 이하 임차금 목적 주담대 한도(限 2억원) 폐지, 15억 초과 APT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限 2억원) 폐지 등
-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보아가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출처: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 12. 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 7. 4.)

- **(시스템 보강)** 대형 해외수주 등이 실제 수출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세제 등 수주지원 시스템 보완
 - 저신용국 리스크 분담 및 대규모 지원 필요성에 대비하여 수은의 특별계정 출자*를 지원하고, 법정자본금 한도(現 15조원) 상향 추진
 - * 저신용국(국가신용도 B+ 이하) 인프라사업 수주시 정책금융 공급(現 1.1조원)
 - 정책 금융기관(산은·수은 등)이 대표 금융추천자로 취득한 대출채권을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
 - * 공개경쟁입찰 등을 원칙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적용사항이 아님을 명확화하여 일반 금융기관처럼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
 - 국내 건설사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추진
 - * 해외건설수주에 따른 대손 위험 완화를 위해 국내건설기업이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손충당금 설정 허용

출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 7.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3 정부 업무보고(국토교통부, 2023. 1. 3.)

Ⅰ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추진
- **(전매제한)** 지역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완화('23.3 「주택법시행령」 개정)
 - **(수도권)** 현행 최대 10년* → 최대 3년**으로 완화
 -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규제지역 여부, 분양가 수준별 6개월~10년 적용중
 - **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6개월
 - **(비수도권)** 현행 최대 4년 → 최대 1년*으로 완화
 - *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 광역시(도시지역) 6개월, 그 외 폐지
- **(실거주 의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21.2~)되는 실거주 의무(2~5년) 폐지('주택법」 개정안 발의)
- **(중도금 대출)** HUG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현행 12억원)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 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23.1분기)
- **(특별공급 기준)**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 폐지, 분양가와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 허용('23.2)
- **(청약 제도 합리화)** 청약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23.1.),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 허용('23.2)
 - * 현재 규제지역 수도권 광역시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1순위 25%는 1주택자도 당첨가능
 - ** '18.12월 이전에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 없음, '21.5월 이전에는 유주택자도 무순위청약 신청가능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2. 9.
김정재 의원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계속 거주 의무 변경 등

[STOP! 분양가 상한제: 2019 국회의원 이종구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주택법」·「공향소음방지법」·「자율주행자동차법」·「철도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3. 1. 16.

□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응해 주택공급과 부동산 세제 및 대출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함

- 주택 270만 호 공급계획,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증과세율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규제지역 내 대출규제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를 인하를 통한 보유세 부담완화 정책이 마련됨

□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세제, 금융, 공급 정책 영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시장 정착률을 위해 각 분야에 대한 면밀하고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주택공급확대 정책의 적정성 여부 검토: 부동산시장 하락기에 대응하여 공급시기와 물량 조정 검토

- 금리인상과 부동산시장 정착률: 주택의 실수요자를 위한 시세보다 저렴한 금리의 정책대출 상품과 주택대출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 확대 방안 등 검토

-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 정책적 신뢰성 문제와 제도 재시행에 따른 영향 검토

- 다주택자 증과세율 완화와 거래 활성화: 세제개편만으로는 거래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역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

- 가계부채 부실 심화 문제 및 해소 방안: 취약차주로 인한 금융 부실화 방지 필요

[주택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한 안정적 주택정책 형성을 위한 국내외 제도 및 사례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자료」 2022. 10. 22.

본 연구는 주택가격 변화에 대응한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주택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